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보도자료	
http://www.kihf.or.kr			
보도일시	2026. 8. 27.(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2026. 8. 26.(수) 오후 12:00 이후		총 6쪽
배포일자	2026. 8. 26.(수)	담당부서	가족사업지원부
담당부서장	오청미 (02-3479-7750)	담당자	오은빈 (02-3479-775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개최

- 인구 위기 시대,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 모색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과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방향 논의

-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 이하 한가원)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을 8월 27일(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6년에 총 3차례의 가족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지난 5월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포럼'에 이어 이번 행사는 그 두 번째 자리로 마련되었다.
- 본 포럼에서는 인구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을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인구 변화 대응, ▲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하였으며, 전국 가족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 특별히 이번 포럼은 한가원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지방행정 연구기관, 지역 가족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인구감소지역 가족서비스의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데 의미가 크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가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족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

- 분석대상
 - 전국 229개 시군구(공간군집분석을 통한 5개 유형화)
 - 2025년 전국 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038명 응답 결과
- 주요결과
 - 인구감소지역 89개·관심지역 18개 등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7개(46.7%)가 인구감소 관련 지역으로 지정
 - 인구감소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36.54%로 비감소지역(19.16%)의 약 1.9배, 1인가구 비율 40.56%, 빈집 비율 14.21%로 모두 가장 높음
 - 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인구감소지역이 전반적 만족도 4.53점(5점 만점)으로 비감소지역(4.48점)보다 높으며, 접근 편리성(4.37점)·지역사회 관계 확대(4.17점)·운영 시간대 다양성(4.19점)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높게 나타남
 - 인구 천명당 가족센터 참여인원은 인구감소지역 432명으로 비감소지역(173명)의 2.5배 수준. 규모는 작지만 주민 대비 이용률은 훨씬 높아 지역 생활의 핵심 거점 역할 수행
 - 반면 가족센터 전체 직원 수는 인구감소지역 평균 26.0명으로 비감소지역(47.6명)의 54.6% 수준이며,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중 50개소(55.1%)가 최소 예산 유형(마형)에 해당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고도화 방안'을 주

제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재희 가족센터사업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소영 기획조정본부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 장성군가족센터 이정문 센터장이 참여하여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의 운영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구연 한가원 이사장은 "인구감소지역의 가족들이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을 구체화하여 인구 위기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개요

- **행사명:** 인구 위기 시대, 가족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찾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전략 포럼
- **목적:** 저출생·고령화 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전략 모색을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 **일시:** 2026. 8. 27.(목) 14:00 ~ 16:00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주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진행 일정**

시간	순서	
14:00-14:15	개회	사 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 오청미 부장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사진촬영 등
14:15-14:45	주제발표 1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연 교수
14:45-15:05	주제발표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의 방향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연구위원
15:05-15:15	휴식	
15:15-16:00	종합토론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고도화 방안 - 좌 장: 진미정 교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토론자: 안재희 가족센터사업본부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소영 기획조정본부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대욱 자치분권제도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정문 센터장(장성군가족센터)
16:00	폐회	

붙임2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현황 분석 연구결과 요약

□ 연구 개요

- 연구주제 :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책임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부교수
 - 공동연구진 : 윤성은(구리시가족센터장), 노신애(서울대 박사), 장근호(가천대 연구원)
- 연구구성 : ①환경 분석(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유형화) → ②운영 실태 분석(행정자료·성과 조사·사례조사·FGI) → ③서비스 모델 도출

□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지역 특성

- (지정 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관심지역 18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최초 지정 이후 2026년 10월 재지정이 예정되어 있음
 - 지역별로는 전남 16개, 경북 15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전북 10개, 충남 9개 등의 순
- (지역 특성)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주민등록인구 53,107명으로 비감소지역(360,292명)의 7분의 1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율(36.54%), 1인가구 비율(40.56%), 빈집 비율(14.21%)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음

주요 지표	인구감소지역(89)	관심지역(18)	비감소지역(122)
주민등록인구(명)	53,107	140,838	360,292
인구증가율(%)	-1.02	-0.86	0.31
합계출산율	0.98	0.81	0.78
고령인구비율(%)	36.54	25.58	19.16
1인가구비율(%)	40.56	39.77	35.60
빈집비율(%)	14.21	11.64	7.79
사회복지예산비중(%)	24.88	42.96	49.13

- 다만 합계출산율은 인구감소지역이 0.98로 오히려 가장 높아, 인구감소가 출생아 수보다 인구 유출·고령화와 더 밀접함을 시사

□ 가족센터 운영 실태

- (설치 현황)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26개 지역에 가족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지역은 3곳(부산 중구·강서구, 대전 유성구)임
- (예산) 인구감소지역 가족센터 89개소 중 50개소(55.1%)가 최소 예산 유형인 '마형'에 해당하는 반면, 비감소지역은 '나형'(40.8%)·'가형'(27.5%)에 집중되어 예산 지원 구조의 불균형이 확인됨
- (인력) 기본직원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5.8명, 비감소지역 7.3명이며, 전체직원은 각각 26.0명과 47.6명으로 비감소지역이 약 1.8배 많음
- (운영 주체)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 직영 비율이 19.1%로 비감소지역(3.1%)보다 크게 높음. 위탁의 경우에도 비감소지역은 학교법인(대학) 위탁이 27.6%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7.0%에 그쳐, 위탁을 맡을 전문 주체가 부족한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 **이용 실태 및 만족도 (2025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N=10,038)**

- (참여인원) 센터당 연간 참여인원은 인구감소지역 평균 23,247명, 관심지역 31,338명, 비감소지역 58,706명으로 절대 규모에서는 차이가 큼
- (천명당 참여인원 역전) 그러나 인구 천명당 참여인원으로 환산하면 인구감소지역 432명, 비감소지역 173명으로 인구감소지역이 2.5배 높게 나타남. 규모는 작지만 주민 대비 이용률은 훨씬 높아,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족센터가 주민 생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만족도) 지역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 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문항(5점 만점)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비감소지역
프로그램 만족	4.68	4.65	4.63
지역사회 관계 확대	4.17	4.08	4.01
접근 편리성	4.37	4.26	4.22
운영 시간대 다양성	4.19	4.08	4.06
전반적 만족	4.53	4.47	4.48

- 특히 접근 편리성, 지역사회 관계 확대, 운영 시간대 다양성에서 차이가 뚜렷하여, 소규모 지역에서 가족센터의 사회적 연결 기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어려움 (인구감소지역 7곳, 관심지역 2곳 관계자 FGI)**

- (이용 대상층 변화) 결혼이민자 신규 유입은 급감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와 동반가족이 급증하고, 일반 지역주민으로 이용층이 확대되는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공간·인력) 공간 협소 및 분소 필요성, 노후 차량 등 이동수단 부족, 언어발달지도사 등 특수 인력 채용난, 종사자 처우 미흡과 잦은 이직
- (예산·사업) 총액이 아닌 '칸막이' 예산 구조, 최소예산(마형) 센터의 기본 예산 부족, 인건비 없는 사업 예산 배정, 지자체 재량사업의 무분별한 이관
- (전달체계·평가) 광역 지역의 접근성 문제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부담, 실적 중심 평가의 한계, 외국인 지원 등 지역 특화 사업 실적 미반영

□ **개선방안 제언: 9대 핵심과제**

- ① 인구감소지역 특화사업 신설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 ② 인구감소지역 운영 특례지침 및 평가체계 정비
 - ③ 광역 가족센터 기능 강화 및 권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 ④ 서비스 대상 재정립 및 맞춤형 사업 정밀화
 - ⑤ 프로그램 운영 혁신: 세대통합 및 시차제 사업 구조
 - ⑥ 공간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이동성 강화
 - ⑦ 지역 복지 통합연계체계 구축(패밀리 허브 모델)
 - ⑧ 스마트(AI) 가족센터로의 고도화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⑨ 법·제도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 특히 ① 관련, (가칭)「가족센터 지역활력계정」 신설, 성과연동형 차등 배분, 2027년 시범(10개 내외) → 2028~2029년 확대(30개 내외) → 2030년 전 지역 정착의 단계적 로드맵 제안